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젠더론적 검토*

김 지 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 관점에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를 둘러싼 기존 논의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일본의 복지(국가)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러한 젠더관계(특히, 여성의 역할)가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서구에서의 비교복지국가론의 연구흐름과 관련하여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젠더 관점이 없어서는 안 될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일본의 복지개혁 이전인 1960·70년대 일본형 복지국가체제가 형성되었을 당시에는 젠더관계가 어떤 식으로 내재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1980년대 초반 복지개혁 이래 실제 제도에서 구체적인 개혁이 단행되어 그 재편의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어떤 식으로 수정(변화)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젠더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변화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는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일본형 복지국가체제, 젠더 관점, 젠더관계, 여성의 역할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kjimi229@kyungnam.ac.kr)

I. 서론

일본의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소개·분석·비판하는 방대한 연구의 축적이¹⁾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다룬 연구의 대부분은 ‘일본이 복지국가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종래 일본의 복지국가체제를 둘러싸고는 그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는 ‘위치지우기 힘들다’는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복지국가를 둘러싸고는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 ‘특수한 존재’로 논의되어온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서구에서 왕성하게 전개된 비교복지국가 연구의 새로운 조류는 일본의 복지국가 연구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1990년대 이후 서구에서 이루어진 비교복지국가론의 연구흐름에 커다란 자극을 받아 그때까지 ‘특수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일쑤였던 일본의 복지국가를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정책 등을 중심으로 ‘비교복지국가론의 이론적인 틀 속에서 일본의 복지국가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소위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특징)²⁾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大澤眞理, 1993, 2002; 新川敏光, 1993, 2005; 宮本太郎, 1997; 埋橋孝文, 1997, 2001; 武川正吾, 1998, 1999; Uzuhashi, 2005; 金智美, 2006).

이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복지국가 연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복지국가라는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G.)의 ‘복지국가레짐’론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당시 일본형

1) 그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서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1984~1985, 1988)을 들 수 있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일본형’ 복지국가체제라는 용어는 비교복지국가론의 이론적인 틀을 사용하여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한다든지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이 지니는 특징을 이해하고자 할 때의 개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복지국가체제의 특징을 포착하고자 이루어진 상기와 같은 연구들이 복지국가레짐론의 방법론에 자극을 받아 그것을 나름대로 응용 내지는 수정한 비교복지국가론의 이론적인 틀로써 일본의 복지국가체제를 분석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특징을 찾고자 시도된 연구들이 에스핑 앤더슨의 방법론을 응용·수정한 이론적 분석틀의 하나로서 ‘젠더’(젠더 관점)를 도입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러한 연구들은 복지국가의 일본모델에 성별분업에 근거한 젠더관계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일본형 복지국가체제가 ‘가족주의’를 전제로 성립되었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宮本太郎, 1997: 33-38; 武川正吾, 1999: 150-157; 大澤眞理, 2002: 66-69; 新川敏光, 2005; 金智美, 2006: 230-234).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는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와 탈공업화의 동향 속에서 지금까지 일본모델을 지지해온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내외적인 압력으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게 되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미야모토(宮本太郎) 등은 2000년대 초반 현재 가족주의적인 일본모델에 내재해 있던 젠더관계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일본형 복지국가의 대체구조(가족복지 등)가 기능부전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宮本太郎ほか, 2003: 295-296; Uzuhashi, 2003). 이는 즉, 이제 일본의 복지국가는 그것이 전제해 왔던 ‘가족주의’의 모순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가 공적케어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을 들어 복지국가의 일본모델이 가족주의로부터 탈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新川敏光, 2009: 56-59).

이상과 같은 일본의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의들에 입각하자면, 젠더 관점 없이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특징을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일본의 복지국가를 둘러싼 환경변화 속에서 ‘체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는 일본모델이 가족주의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인지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도 젠더 관점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 관점에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를 둘러싼 기존 논의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일본의 복지(국가)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러한 젠더관계(특히, 여성의 역할)가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의 복지국가체제와 젠더’ 관련 주제의 연구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복지국가체제가 형성된 시기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족주의적’ 복지(국가)체제의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최근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복지체제에도 유익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본 연구에서의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젠더론적 검토’를 위한 주요 연구내용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19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를 통해 복지국가체제가 확립되었지만, 1981년 ‘제2차 임시행정개혁조사회’가 주창한 정부보조금 삭감을 계기로 1980년대 중반 이래 대대적인 복지개혁이 단행되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를 일본에서의 복지국가체제 재편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복지개혁 전후로 구분하여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성격이나 젠더관계(여성의 입장)를 논의하는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개혁이 단행되기 이전인 1960·70년대 일본형 복지국가체제가 형성되었을 당시에는 젠더관계가 어떤 식으로 내재되었으며(즉, 일본의 복지국가가 여성을 어떻게 취급해 왔으며, 그로 인해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 또한 그것이 1980년대 초반 복지개혁 이래 실제 제도에서 구체적인 개혁이 단행되어 그 재편의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어떤 식으로 수정(변화)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 경우 특히, 일본형 복지국가체제 재편에서의 여성의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적돌봄체제(민영화를 통한 보육정책의 확대 및 개호정책의 전환)가 정비·확대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내외에서 다양한 학문적 입장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는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와 젠더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재검토하였으며, 나아가 일본형

복지국가체제 재편에서의 여성의 역할 변화를 가늠하기 위하여 종래 ‘가족주의’적인 일본형 복지국가체제 하에서 여성이 놓여 있던 입장(즉, 가족내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 가계보조적인 임금노동자로서의 역할, 복지볼런티어로서의 역할)에 기초하여 그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보육·개호관련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II. 일본의 복지국가체제와 젠더 관점

본장에서는 우선,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젠더론적 검토’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왜 젠더 관점이 동반되어야 하는지 서구에서의 비교복지국가론의 연구흐름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확인하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서구에서의 비교복지국가론의 연구흐름을 이끈 기수 역할을 한 것은 덴마크의 사회과학자인 에스핑 앤더슨이다. 이에, 당시 그의 복지국가 논의를 기점으로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둘러싸고는 어떠한 논의가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스핑 앤더슨은 1990년에 발표된 저서에서 사회보장지출의 대소에 의해 복지국가의 발전수준을 단선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급여의 대상과 수준 등의 제도적 내용의 상이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차이가 간과되므로 복지국가의 구조적 측면을 포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종래와 같은 복지국가의 포착방식을 대신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만들어내는 복지국가의 상이성을 포착하기 위해 탈상품화와 사회적 계층화의 지표를 사용하여 복지국가의 질적인 분석을 시도한 결과 세 가지 복지국가레짐(Welfare-State Regime)의 유형을 구성하고,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복지국가레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세 가지 복지국가레짐의 유형이란, 먼저 스칸디나비아국가들과 같이 탈상품화가 진행되어 제반 사회계층에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주의가 관철되어 있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레짐, 다음으로 독일·

오스트리아·프랑스·이탈리아 등과 같이 탈상품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사회계층의 지위격차를 반영하는 계층구조를 지니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레짐, 그리고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같이 탈상품화가 그다지 진행되지 않고 계층구조 및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이중구조가 보여지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레짐이다(Esping-Andersen, 1990: 26-29, 1992: 111-114). 그런데,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론에서 일본의 위치는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케이스로 이해되었다. 즉, 일본은 스위스와 함께 탈상품화 정도에서는 프랑스·독일 등과 같이 보수주의적 복지국가군에 근접한 것으로 분류되었고, 사회적 계층화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를 분류할 때에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Esping-Andersen, 1990: 52, 74). 다시 말해, 일본과 스위스의 분류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오사와(大澤眞理)는, 에스핑 앤더슨이 세계 각국의 복지국가를 분류한 시기인 1980년 시점의 일본 복지국가는 “지출규모가 OECD국가들의 최저수준으로 사회정책이 선별주의적이고 가족지원 지향이 낮고, ‘탈상품화’ 정도가 낮으며 개인에게 시장의 참여를 강요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자유주의’적인 동시에, 사회보험의 직업별 분립과 계층성(근무처 기업규모별 격차 등)의 면에서는 ‘보수주의’적이라고 생각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大澤眞理, 2004: 26). 에스핑 앤더슨 자신은 그후 일본모델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혼합모델’(Esping-Andersen, 1997)로 이해하고, 1990년의 저서가 일본어판(岡澤憲芙·宮本太郎監譯, 2001)으로 출판되었을 당시 「일본어판에의 서문」을 통해 그의 유형론에서 일본은 시금석이기도 한 것처럼 분류하기 곤란한 케이스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의 일본의 자리매김에 수정을 가한 것은 캐나다의 사회정책학자인 시로프(Siaroff, A.)였다. 그는 1980년대의 일(노동)과 복지의 젠더에 의한 평등(불평등)을 지표화함으로써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유형에의 수정을 시도하였다. 즉, OECD 23개국을 중심으로 한축으로는 여성노동조건인 양호도(=여성의 취업기회, 임금의 젠더격차, 관리직 종사자의 여성비율 등)를 사용하여 고용의 젠더평등을 지표화하고, 다른 한축으로는 가족지향 복지정책의 발전도(=가족정책의

총지출, 보육서비스와 출산·육아휴가의 충실도 등)로 서열을 매긴 후에 두 지표를 조합함으로써 각국을 분류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시로프는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론에서는 분류가 애매하였던 일본과 스위스를 그리스·스페인 등과 가까운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Siaroff, 1994).³⁾

이상과 같이 일본과 스위스의 자리매김이 에스핑 앤더슨과 시로프의 분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비교복지국가론의 분석틀의 하나로서 젠더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무렵 서구에서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에는 젠더 관점이 결여되는 있다는 것 등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논의의 출발에 두고 계승·발전시키는 형태로 비교복지국가 연구가 왕성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구에서의 논의에 자극을 받아 일본 내에서도 종전의 일본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형태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특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III. 복지개혁 전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와 젠더관계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복지국가론의 이론적인 틀 속에서 ‘일본형’ 복지국가 모델을 이해하고자 시도된 대표적인 연구들을 보면, 일본의 복지국가를 ‘고용보장·가족주의의 융합모델’(宮本太郎, 1997, 2003), ‘기업사회모델’(武川正吾, 1997, 1998, 1999), ‘남성생계부양자모델’(大澤眞理,

3) 시로프는 ①여성노동조건의 양호도와 ②가족지향 복지정책의 발전도라는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복지국가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제1유형(=프로테스탄트적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은 ①과 ②의 득점 모두가 높은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 등이고, 제2유형(=프로테스탄트적 자유주의 복지국가)은 ①의 득점은 높지만 ②의 득점은 낮은 국가들인 미국·캐나다·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이고, 제3유형(=선진 그리스도교 민주적 복지국가)은 ①의 득점은 낮지만 ②의 득점이 높은 국가들인 프랑스·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이고, 제4유형(=후발 여성동원 복지국가)은 ①과 ②의 득점 모두가 낮은 국가들인 일본·스위스·그리스·스페인 등이다.

1993, 2002), 가족주의모델(新川敏光, 2005) 등으로 특징짓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각각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일본모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주장들이 일본모델의 젠더 분석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에 ‘가족주의’적 복지국가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일본모델에서의 여성의 입장은 어떠하였는지 포착하기로 하자.

1.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형성과 젠더

1)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특성

(1) ‘고용보장과 가족주의의 융합’ 모델

정치학자인 미야모토는 ‘복지국가의 신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1970년대까지 일본 복지국가의 전개를 개관함으로써 그 특징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일본의 복지국가 특징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경제정책·고용정책과 가족주의 등 사회정책의 틀 밖에 있지만 그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도 고려할 필요성을 지적한 후,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여 일본모델을 ‘고용보장과 가족주의가 연동’한 모델이라고 주장하였다(宮本太郎, 1997).

우선, 미야모토는 일본의 복지국가 특징을 ‘고용보장과 사회보장의 상관구조’에서 찾고자 하는 우즈하시(埋橋孝文, 1997: 185-197)의 논의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우즈하시가 완전고용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일본모델에서의 고용·노동시장과 복지국가 정책의 독특한 결합에 주목함으로써 실업률과 사회보장지출 비율이 둘 다 낮은 일본의 경우 ‘고용·노동시장의 양호한 실적이 사회보장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특히 미야모토는

4) 부연하면, 우즈하시의 현대의 복지국가를 “고용보장과 사회보장을 축으로 소득재분배 기구를 불가결의 일환으로 내포하는 현대국가 내지 현대사회보장체제”로 이해한 후,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고용보장과 사회보장 수준을 조합한 독자적인 비교의 틀로써 측정하고, 그러한 기능의 상관구조로서의 일본모델을 ‘워크페어레짐’(workfare regime)이라 하였다(埋橋孝文, 1997, 2001; Uzuhashi, 2005). 단, 여기에서 말하는 ‘일본

사회보장과 고용보장의 대체관계를 고려할 때 완전고용의 실현을 둘러싼 조건들에 유의하면서 완전고용에의 개입수준과 복지에의 개입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완전고용 유지를 둘러싼 조건들을 명확히 하고자 시도하였다.

일본의 경우 ‘낮은 실업률과 작은 복지국가 규모’에서 보면 우즈하시가 지적하는 것처럼 고용정책이 사회정책을 대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논리일 것이다. 이를 고려한 후에, 미야모토는 일본의 고용정책이 완전고용을 유지한 배경에 주목할 때 대기업의 장기적 고용관행과 다른 나라에 비해 돌출적인 공공투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규제 등이 고용창출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그러한 속에서 후발지역을 위한 공공투자와 중소기업보호정책은 일종의 재분배효과를 초래한 반면, 복지정책(예를 들면, 연금과 사회복지서비스) 그 자체는 잔여적인 성격이 강하게 되어버렸다고 주장하였다(宮本太郎, 1997: 33-38). 나아가 그는, 이러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대체관계’가 가능하였던 전제로서 고용보장에 의한 임금소득자(특히 남성)의 수입이 가족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틀인 가족주의의 존재를 염두에 두면서 일본의 복지국가와 가족·여성의 관계도 시야에 담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즉 미야모토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장기고용관행, 중소기업과 소매업·농업에 대한 보조금 및 각종 보호정책과 공공사업이 남성의 고용을 창출한 반면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것으로서 가족이 아동보육과 고령자개호의 현장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宮本太郎, 1997: 33-38). 나아가 그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포착하자면 일본에서는 대기업 노사의 고용관행과 고용정책(특히 각종 보호규제와 공공사업 등의 공적 고용창출)이 연동함으로써 고용보장이 사회보장을 대체하는 기능을 지니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남성(남성 임금소득자)의 고용보장은 가족내에서의 여성의 무상노동을 전제함으로써 ‘고용보장과 가족주의가 연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⁵⁾

형 워크페어’는 워크페어를 ①‘복지에서 취업으로’, ②‘취업에 동반한 복지’, ③‘처음에 취업은 필수’라는 유형으로 구분할 경우 ②와 ③유형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라고 한다(宮本太郎ほか, 2003: 325-328).

5) 최근 미야모토는 이 같은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 형성에는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구조

(2) 자본제와 가부장제의 상호연관구조: ‘기업사회’ 모델

사회학자인 다케가와(武川正吾)는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 개념에 더해 ‘탈가부장제화’ 개념도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포착할 때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시하고, 이 두 가지 기준 즉 자본제(상품화-탈상품화)와 가부장제(가부장제-탈가부장제) 축에 따라 일본형 복지국가를 판단하자면 탈상품화 효과도 탈가부장제화 효과도 둘 다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武川正吾, 1997, 1999).

다케가와는, 20세기 후반의 복지국가는 ‘근대가족’을 자명의 전제로 성립되어 있지만, 복지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정책의 기능 여하에 따라 그것은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보고 복지국가의 ‘가부장제-탈가부장제’ 축에 주목하였다(武川正吾, 1997, 1999: 150-155). 여기에서 말하는 ‘근대가족’이란, 남편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노동에 종사하여 처자식을 부양하는 대신에 아내는 가정내에서의 가사노동에 종사하여 구성원의 케어를 담당하는 지극히 ‘가부장제적인 가족’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이러한 근대가족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복지국가가 전제로 하고 있던 ‘가부장제적인 가족’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복지국가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상을 복지국가의 ‘탈가부장제화’로 부를 수가 있다고 하였다(武川正吾, 1997). 즉, 그가 말하는 ‘탈가부장제화’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가부장제적인 근대가족의 재생산과 친화적이지 않게 되는 과정”을 포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武川正吾, 1999: 153).⁶⁾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다케가와는 1973년 이후 형성된 일본형 복지국가의 특징으로서 ‘낮은 국민부담률’, ‘근대 가부장제국가에의 과도한

로서 자유주의적인 대체구조인 ‘기업복지’와 보수주의적인 대체구조인 ‘가족주의’가 공고하게 상호 보완하면서 공존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宮本太郎, 2003: 17).

6) 예를 들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에서의 ‘탈가부장제화’ 지향의 지표는 고용기회 균등을 위한 노동조건 규제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는가, 과세와 사회보험료의 징수 단위가 세대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되어 있는가, ‘한 집안의 기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유족급여는 폐지되었는가, 사회보장 각출과 급여를 둘러싼 남녀간의 취급 차이는 개선되었는가, 육아휴직(부모휴가)과 고령자개호를 위한 휴직제도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는가 등이다(武川正吾, 1999: 153-154).

의존’,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공헌원칙의 편중’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들고 있다(武川正吾, 1998).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특징은 일본의 경우 1970년대(특히 1973년) 이후 사회보장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의 크기를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이 서구 선진국의 복지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일본의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사회정책군(群)이 근대가족이 담당해야 할 여러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그것들을 전제로써 성립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즉,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지출이 의료·연금 중심이고 대인사회복지서비스(케어)에 관한 지출이 적은 이유는, 일본의 경우 케어는 가족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것에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일본의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사회정책군이 필요(need)보다 노동(work)과 공헌(contribution)이라는 가치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각출원리(contribution principle)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중심이 되었고, 또 그러한 사회보험급여는 노동력의 상품화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설계되었으며, 더욱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존재방식은 장기고용, 연공서열 임금, 기업별 노동조합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일본 노사관계의 존재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구축되었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일본형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나 탈가부장제화 정도 둘 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武川正吾, 1997, 1999: 150-157).

(3)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가족의존·남성본위·대기업본위

사회정책학자인 오사와는 일본의 사회정책시스템은 고도경제성장기 이래 가족과 기업이라는 두 개의 하위시스템이 생활보장과 복지의 상당부분을 책임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운용되어 왔다고 하면서, 일본의 사회보험 등의 사회적 안전망의 특징을 남성의 고용과 처우에만 중점을 두는 ‘남성생계부양자형’으로 특징짓고 있다(大澤眞理, 2002).

오사와에 의하면, 고도경제성장기를 통해 진행된 남성의 샐러리맨화는 고도성장에 의해 남성세대주의 수입만으로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

(소위 ‘가족임금’)에 도달하여, 그로 인해 이 시기에 ‘가족임금=남성부양자’ 모델이 일반적으로 성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면, 여성의 경우는 고도경제성장기를 통하여 ‘M자형의 연령계층별 노동력 그래프’(간단히 말해, 25세부터 34세까지 여성노동력 비중은 저하하고 30세후반 이후의 여성노동력 비중은 상승하는 경향)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로써 그는, 일본의 경우 고도경제성장기를 통하여 남성의 고용자화가 진행된 반면에 유배우자 여성 중에서 차지하는 쉐러리맨 아내의 비중이 증대한 결과, “쉐러리맨 남편과 전업주부의 아내”라는 커플을 만들게 되었다고 보았다(大澤眞理, 2002: 57-65).

그러한 가운데, 고도경제성장기를 통해서 형성된 일본의 사회보장체제는 첫째, 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 내에서 서로 돕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취해져(‘가족의존’), 그 경우에 가족은 ‘남편은 일 아내는 가정’이라는 성별 역할분업을 행하는 것이 암묵의 전제가 되었던 것이며, 둘째, 사회보장은 남성고용자의 욕구를 중심(‘남성본위’)으로 세대단위로 설계되었으며, 셋째, 사회보험제도와 조세제도는 대기업 노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였다(‘대기업본위’)고 주장하였다. 오사와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지니는 일본의 사회정책시스템을 ‘남성생계부양자형’⁷⁾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大澤眞理, 2002: 66-69).

이리하여, 고도경제성장기에 정비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특히 의료와 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 하에서는 대기업 정규직원(주로 남성)에게 가장 후한 생활보장이 제공되었던 반면, 여성은 계속해서 일하는 것보다

7) 그후, 오사와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세계 각국의 생활보장시스템을 남성생계부양자형, 양립지원형, 시장지향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大澤眞理, 2007: 53-59; 김영 옮김, 2009: 64-70), 이때 말하는 남성생계부양자형 생활보장시스템은 그가 종래 일본 사회정책시스템의 특징을 지칭할 때 사용한 ‘남성생계부양자형’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사와가 에스핑 앤더슨의 ‘보수주의’를 수정하여 명명한 ‘남성생계부양자형 생활보장시스템’은 “장년층 남성(단, 모든 남성이 아님)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동시장이 규제되는 것을 전제로 남성의 근로능력 상실이라는 위험에 대비해 사회보험이 정비되고, 가족구성원은 세대주에 부속된 존재로서 보장되며, 가정책임은 아내가 풀타임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지원하는 보육, 개호 등의 서비스는 저소득이거나 ‘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되는 모델을 말한다(大澤眞理, 2007: 54; 김영 옮김, 2009: 65).

피부양자의 아내가 되도록 촉구되어(가령, 1961년에 도입된 급여소득자에 대한 ‘배우자공제’와 이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나중에 도입된 ‘제3호피보험자제도’⁸⁾ 등), 피보험자(남편)가 획득하는 보장에 부수적으로 딸린 것에 지나지 않았고, ‘개인’으로서 의료와 연금에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여성에 대해서는 취업하더라도 남편에 의한 ‘피부양가족’의 범위 내에 머무는 저임금의 파트타임 취업을 조장하게 되어 사회보장제도에 커버되지 않는 여성고용자를 증대시켜 나갔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大澤眞理, 2002: 71).

2)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특성과 젠더관계

이상과 같은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제반 연구에서는 의료와 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고용정책 등을 중심으로 일본모델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상기와 같은 주장들이 일본모델 형성과정에서의 젠더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째,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고용보장과 가족주의의 융합’으로 보는 미야모토의 주장은 고용보장이 가족주의와 연동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는 전적으로 가족(여성)이 보육과 개호 등의 가족돌봄 제공자로 자리매김되어 있었다는 것과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자본제와 가부장제의 상호연관구조’로 보는 다케가와와 주장은 일본의 복지국가가 경영가족주의 및 일본적 경영 등의 특질을 지니는 ‘기업중심사회’와 상호 연관구조 속에서 형성되어 왔음을 밝힘으로써 일본형 복지국가에 기업사회화 구조 및 그에 따른 가부장제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보는 오사와의 주장은 일본의 사회보험제도가 공·사에 걸쳐 복수로 분립되어 있고, 또 그 제도간의 재정력 격차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그에

8) ‘제3호피보험자제도’는 1985년 연금개혁 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용자의 피부양 배우자도 제3호피보험자로서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제3호피보험자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용자연금의 피보험자 보험료 각출로써 충당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따른 부담과 급여조건의 격차 및 급여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컸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이중구조(사회적 계층화)는 물론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연금과 의료 등)가 여성을 배제하는 장치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복지국가체제 형성 과정에서는 남성의 고용보장을 중시하여 그 기반으로서 ‘기업’을 중시·보호하는 구조를 구축해 왔으며, 또한 보육·개호 등 돌봄제공자로서 여성을 중시하여 그 기반으로서 ‘가족’을 중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러한 구조 속에서 ‘기업(고용의 장)’과 ‘가족(돌봄의 장)’이 일본의 복지국가를 대체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은 ‘가족에 대해 돌봄을 행하는 존재’ 또는 ‘가계보조적인 파트타임노동자’로 자리매김되어 왔음을 엿볼 수가 있다.

2. ‘가족주의’적 복지국가체제와 가족·여성의 입장

상기와 같은 연구성과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가족주의모델’로 유형화하고 있는 신가와(新川敏光)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그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삼분법(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에 수정을 가하여 ‘가족주의’를 추가함으로써 복지국가 사분법을 제시하였는데,⁹⁾ 이 ‘가족주의’에 남구·일본·스위스·아일랜드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가족주의모델’이란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가 낮고, 사회적 계층화를 재생산하며, 여성의 가정내 복지가 당연시되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복지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족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보육·개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가 발달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新川敏光, 2005: 267-274).

그러나,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제도 전체적으로 볼 때 발전이

9) 그가 복지국가 사분법을 주장한 것은 일본모델을 가리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혼합 모델’(Esping-Andersen, 1997) 또는 ‘동아시아모델’(Goodman and Peng, 1996) 및 ‘유교주의’(Jones, 1993)로 특징짓는 유형론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뒤쳐졌다고는 하지만, 19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를 통해 대폭 확대되었다(坂田周一, 1983). 이에, 일본이 복지국가인가 아닌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복지국가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형 복지국가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형 복지국가레짐’의 특징을 포착하고자 시도된 연구를 보면, 일본형 복지국가가 전제하는 가족주의는 일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원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고, 특히 가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가족·여성이 놓여 있던 다양한 입장을 이해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金智美, 2006).

가령, 그는 아동보육에 초점을 맞추어 고도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일본형 복지국가레짐’의 특징을 포착할 경우 당시 여성노동보장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던 보육서비스의 주된 대상이 ‘공원·파트타임노동자’와 ‘공무원·전문직’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그 당시 보육서비스의 주된 대상자의 하나로서 ‘공원·파트타임노동자’가 공공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고도경제성장기의 보육정책이 저소득층을 위한 가정원호적 기능(가계보조로서의 여성노동보장 기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당시 보육서비스의 주된 대상자의 한 축이 비교적 안정된 직업층에 종사하는 ‘공무원·전문직’이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공공보육이 ‘일부 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젠더평등’을 촉진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金智美, 2006: 109-110). 또한 그는, 고령자개호와 관련하여서는, 고령자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고도경제성장기의 ‘일본형 복지국가레짐’의 특징을 포착할 경우 당시 ‘가족개호 우선원칙’ 아래 행정당국에 의해 제공되던 고령자복지서비스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전업주부층을 중심으로 하는 볼런티어그룹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공적복지를 커버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金智美, 2006: 206-209). 나아가 그는, 이러한 것들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가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가족은 ‘복지담당자’로서 여성은 ‘가족내 돌봄제공자’와 ‘가계보조적인 파트타임노동자’로서 일본의 복지

국가 기능을 대체하였다고 논의되어온 것에 수정을 가하여 여성의 기능은 그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보ランティア’로서도 일본형 복지국가 기능을 대체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 한편으로 여성은 복지국가의 혜택을 누리면서 ‘젠더평등’을 달성한 주체로서도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金智美, 2006: 230-234).

요컨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형성과 관련하여 그 특징을 찾고자 시도된 기존 논의들에 입각하여 말하자면 일본의 복지(국가)모델을 ‘가족주의’적 복지국가체제로 특징짓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가족주의는 다원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가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여성은 ‘돌봄제공자’, ‘가계보조적인 파트타임노동자’,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보ランティア’ 등으로서 일본의 복지국가 기능을 대체해 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족주의적 복지국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극히 일부이지만 일본의 복지국가 혜택을 향유하면서 사회내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온 여성들이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V. 복지개혁 후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와 젠더관계

그럼, 19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를 통해 이상과 같은 ‘가족주의’적인 복지국가 모습을 갖추게 된 일본모델은 1980년대 이후 추진된 복지개혁을 거치면서 오늘날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을까? 본장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본형 복지국가체제 재편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가족주의’가 복지국가체제 재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종래의 젠더관계(특히 여성의 입장)의 변화 양상을 포착하고자 한다.

1. 기로에 서 있는 일본형 복지국가체제

먼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본형 복지국가체제 재편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일본모델을 지지해온 여러 조건들이 내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으므로 21세기 초반 현재 일본형 복지국가체제가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宮本太郎ほか, 2003; Uzuhashi, 2003; 武川正吾, 20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케가와는 일본형 복지국가체제가 경영가족주의와 일본적 경영 등의 특색을 지니는 ‘기업중심사회’와 상호 연관구조 하에서 형성되어 왔다고 하였다. 최근 그는 복지국가의 포착방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킨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복지국가레짐에 관한 특징으로서 “약한 사회민주주의와 강한 국가관료제”, “적은 사회지출과 많은 공공사업”, “약한 사회규제와 강한 경제규제”를 들고 있다(武川正吾, 2005: 114). 즉 그는, 복지국가를 “국가목표로서의 복지국가(=복지정치)”, “급여국가로서의 복지국가(=재분배구조)”, “규제국가로서의 복지국가(=규제구조)”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첫째, 일본 복지정치의 특징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힘이 약한 반면 이를 대신하여 일본의 복지국가 형성을 주도한 것이 국가관료제였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재분배구조의 특징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지출 수준은 낮은¹⁰⁾ 반면,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하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규제활동의 특징은 경제적으로는 강력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武川正吾, 2005: 114-124). 그러나, 그는 이러한 특징을 지닐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였던 여러 조건들이 21세기 초반 현재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도전을 받아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일본의 복지국가레짐이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다(武川正吾, 2005: 124-125).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미야모토와 우즈하시 등은 종래 일본형 복지국가 기능을 대체해온 대체구조가 기능부전에 빠짐으로써 21세기 초반 현재 일본형 복지국가체제가 전환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宮本太郎ほか, 2003; Uzuhashi, 2003).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즈하시는 고용·노동시장의 양호한 실적이 사회보장 기능을 대체해 왔고, 미야모토는 기업복지와

10) 다케가와, 이를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일본의 경우 의료와 연금 등의 보편주의적 급여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므로 사회지출 구성의 불균형 발전이라 해야 한다고 한다.

가족주의가 공고하게 공존해 있던 데에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특징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에 의하면 최근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진행된 탈공업화의 진전이 종래의 복지국가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지국가 기능을 대체해온 대체구조를 본래 복지국가의 장치로 어쩔 수 없이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동시에, 일본의 경우 복지국가체제의 확립 자체가 구미제국의 복지국가에 비해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제국의 복지국가군과 똑같은 조정(복지삭감)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한다(宮本太郎ほか, 2003: 295-296). 즉, 이들은 일본형 복지국가의 최근 동태로서 가족과 기업에의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실태와 선진공업국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화와 탈공업화에의 대응이 요구되는 현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미야모토와 우즈하시 등은 워크페어¹¹⁾와 젠더라는 관점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 일컬어지는 1990년대의 일본형 복지국가의 동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그 특징은 첫째, ‘잃어버린 10년’ 사이에 드러나게 된 실업률의 상승과 기업복지의 후퇴에 의해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일본모델을 지탱해온 ‘워크페어’가 기능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 공공사업에 의한 고용창출도 어렵게 됨으로써 미야모토가 말한 “의사복지시스템(가족복지, 기업복지)에 의한 복지국가의 대체”와 우즈하시가 말한 “고용·노동시장의 양호한 실적이 복지국가정책을 대체”라는 지금까지의 일본형의 특징이 후퇴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형의 워크페어’는 대체구조의 동요와 궤도를 같이 하여 기능부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기능부전에 빠져 있는 일본형의 워크페어를 보완하는 사회보장제도(예컨대 고용보험제도, 생활보호제도)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셋째, 일본의 가족중심적 복지레짐의 경우에는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관계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탈공업화의 진행에 의해 가족주의적인 레짐에 내재해 있던 젠더관계가 드러나면서 그 모순을 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宮本太郎ほか, 2003: 324-331).

11) 이에 대해서는 각주 4) 참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1980년대 이후 진행된 경제의 글로벌화와 탈공업화의 동향 속에서 일본은 공공사업에 의한 고용창출이 어려워져 더 이상 낮은 실업률(남성의 고용보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기업복지가 후퇴하였으며, 이에 동반하여 가족주의적인 복지(국가)레짐에 내재해 있던 젠더관계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21세기 초반 현재 일본형 복지국가의 대체구조(기업복지, 가족복지)가 기능부전에 빠져버렸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일본형 복지국가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 재편의 향방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가족주의’적 복지국가체제의 향방

지금까지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가족주의모델’로 특징지었던 신가와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형 복지레짐에 ‘탈가족주의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新川敏光, 2005: 281-308, 2009: 56-59). 그에 의하면, 일본 복지국가체제에 있어서 1980년대는 가족복지와 기업복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 이들 기능을 재활성화시킴으로써 공적복지에 대한 확충을 억제하는 정책이 지향되었다. 그 결과, 1960·7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가족복지의 담당자로 자리매김되고, 여성친화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전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자 이러한 가족주의 강화 움직임에 변화가 나타나 가족주의로부터의 이탈 경향(탈가족주의화)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1989년의 골드플랜과 1994년의 신골드플랜 및 1997년의 개호보험법의 도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적개호지원체제의 정비를 들고 있다(新川敏光, 2009: 56). 즉 그는, 공적개호지원체제의 정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으므로 탈가족주의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가와와는, 이러한 일본의 탈가족주의가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아니라 자유주의모델로 나아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즉, 공적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 자체는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자유주의의 경우 값싼 민간

서비스에 의존함), 일본여성의 고용기회는 여전히 주변적이고 남녀임금 격차는 높은 상태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더라도 이중구조라는 자유주의 모델의 특징을 강화하는 꼴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新川敏光, 2009: 57). 이에 더해, 그는 기업복지에서의 커다란 변화, 즉 일본적 노사관계(종신고용원칙)를 포기하고 고용을 유연화함으로써 기업연금을 개혁(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것 또한 일본형 복지레짐이 자유주의에로 나아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新川敏光, 2009: 58).

한편, 고도경제성장기에 도입된 일본의 사회정책시스템(혹은 생활보장시스템)을 남성생계부양자형이라고 주장한 오사와는 2000년대 초반 일본형 모델에 나타나기 시작한 ‘탈가족화’가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형을 충분히 타파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종래의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의 남성생계부양자형 모델은 1980년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고(大澤眞理, 2002: 106-110), 1990년대에는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일본모델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大澤眞理, 2004: 29-33, 2006: 235-237), 이 또한 실시직전의 변경으로 인해 일본모델이 탈가족화를 지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Osawa, 2005).¹²⁾ 그런데, 2001년 고이즈미정권(小泉政權)이 시작되면서부터 1999년 제정된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¹³⁾의 이념이 내각방침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젠더평등을 추진하는 정책이 정부의 정책체계 내에 명시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일본모델의 전환 가능성도 있었지만(大澤眞理, 2004: 33-39),¹⁴⁾ 결국 고이즈미정권의 탈가족화 지향의

12) 그 이유는, 개호보험제도가 1999년 후반에 자민당 주도 아래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개편에 의해 제도의 근간이 손상된 상태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당시 개편에 있어서 자민당 고위 관계자는 개호보험이 “자식이 부모를 개호한다고 하는 미풍양속을 무너뜨린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를 오사와는 탈가족화에의 철퇴로 보는 것이다(大澤眞理, 2004: 33).

13) 동법에서는 ‘사회제도와 관행’, 곧 생활보장시스템에서 남성생계부양자형을 벗어나 양립지원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大澤眞理, 2007: 154; 김영 옮김, 2009: 177).

14) 2001년 4월 일본의 ‘구조개혁’을 외치며 발족한 고이즈미내각은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인 「호네부토방침(骨太方針)」(2001년 6월, 익년 6월에는 「호네부토방침제2탄」이 나옴) 서두의 ‘생활유신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는 여성에게 친절한 사회를 구축하

내실은 ‘남성생계부양자형’을 탈피할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大澤眞理, 2007: 154-169; 김영 옮김, 2009: 178-192).

즉, 고이즈미정권의 2004년 연금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모델 전환 가능성을 검증한 오사와는, 정부의 연금개혁안(개별 사항)에서는 첫째,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후생연금 확대는 연기되었고,¹⁵⁾ 둘째, 차세대지원의 한 수단으로 육아휴업 중의 보험료 면제조치가 확대되었으며, 근무시간 단축 등에 의해 표준보수가 저하된 경우 급여산정 시에 배려하도록 했으며, 셋째, 이혼 시에 연금을 분할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으며,¹⁶⁾ 넷째, 유족연금의 ‘성별에 의한 편중’을 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과부급여를 다소 제한하는 조치가 강구되었다고 한다(大澤眞理, 2007: 167-168; 김영 옮김, 2009: 189-191).¹⁷⁾ 오사와는 이러한 것들에 근거하여, 2004년 일본정부의 연금개혁에서는 피보험자 자격에 소득 및 노동시간에 따른 제한이 있는 종래의 종적 분할 제도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어 호내부토방침에서 거론된 개인단위화 곧 남성생계부양자형으로부터의 탈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大澤眞理, 2007: 168; 김영 옮김, 2009: 191).

기 위해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개인단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고용에 관한 ‘성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보육소 대기아동을 제로로 하는 프로그램 실시와 방과후 아동을 위한 보육체계 정비를 도모할” 것을 제시하였다(大澤眞理, 2004: 33). 이후, 고이즈미내각에서는 2004년 1월 이후 소득세의 배우자특별공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는 각의결정을 하였고, 기초연금의 제3호피보험자제도의 개혁안(=부부간의 연금분할권, 제3호피보험자도 보험료 부담, 제3호의 기초연금 급여 감축, 단시간노동자 등에게 후생연금을 적용하여 제3호를 축소함)이 제시되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대책플러스원’을 정리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해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안 등을 준비하였다. 오사와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일본모델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15) 그 이유는 외식산업과 체인점 등 파트타임노동자를 많이 사용하는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6) 그러나, 혼인을 지속할 경우의 분할은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하여, 이혼 시의 연금분할은 2008년 4월 이후에 제3호피보험자로 있던 기간에 대해서 강제분할을 통해 반으로 분할하게 되었고, 합의에 의한 분할(단, 합의하지 못한 경우는 법정 판결)은 2007년 4월 1일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납부한 후생연금 보험료 납부기록을 합산하여 반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되었다.

17) 즉 과부급여의 경우 자녀가 없는 30세 미만의 유족 배우자에게는 유족후생연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중고령 과부 가산금의 지급대상을 남편 사망 시 3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축소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일본에서는 ‘가족주의’적인 복지(국가)체제인 일본모델이 ‘탈가족주의’적인 모델(단, 자유주의모델)에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일본모델의 ‘탈가족화’ 수준이 미비하여 종래의 남성생계부양자형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일본모델의 현주소는 무엇일까? 필자는 일본모델의 전환가능성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제3장 제2절(Ⅲ-2)에서 살펴본 ‘가족주의’적 복지국가체제 하에서의 젠더관계(가족·여성의 입장)가 1980년대 초반 복지개혁을 거쳐 1990년대 중반 이후 구체적인 재편의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복지국가의 일본모델이 ‘탈가족주의’적인 모델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보육·개호 등에서의 여성 역할이 복지국가체제 재편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일본모델 전환과정에서의 여성 입장

이상과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개혁 전 1960·70년대의 ‘가족주의’적인 일본형 복지국가체제 하에서 여성이 놓여 있던 입장(역할, 지위 등)에 기초하여 그것이 1980년대 이후(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보육·개호 관련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¹⁸⁾

18) 일본의 경우 복지국가체제 재편과정을 통해 보육·개호 관련 정책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간략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에서의 보육정책은 19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 동안 공공보육소가 급속하게 정비되어 일찍부터 공보육체제를 갖추었지만, 1980년대 이후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및 경제학적인 관점에 입각한 일부 학자들)에 의해 보육서비스공급의 다원화와 민영화가 줄기차게 제기되어 1997년 50년 만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보육소제도가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0년대에는 보육소 예산 억제가 단행되었지만,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급락(당시 ‘1.57쇼크’로 불림)한 것을 계기로 보육정책이 저출산문제와 결부되면서 그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육·양육지원을 위한 행동계획으로서 3단계에 걸쳐 「엔젤플랜(1995-1999)」과 「신엔젤플랜(2000-2004)」 및 「아이·자녀양육응원플랜(=통칭 ‘신·신엔젤플랜’, 2005-2009)」 등을 수립하여, 보육서비스제공에 관

첫째, 종래 여성이 담당하였던 가족내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0년대 중반 이후 3단계(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신·신엔젤플랜)에 걸쳐 추진된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 상황을 보면 2007년 현재 인가보육소가 22,838개소(공립 11,240개소, 사립 11,598개소)로, 이는 1975년 당시 18,238개소(공립 11,545개소, 사립 6,693개소)에 비해 공립보육소의 비중은 감소(1975년 당시 63%에서 2007년 현재 49%로 감소)하였지만 전체 보육소 수가 25.2% 포인트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全國保育団体連絡會·保育研究所編, 2009: 227). 이와 관련하여, 6세 미만 전체 아동 대비 보육소 입소아동수(즉 아동 보육율)를 보면 1975년 당시 13.7%였던 것이 2007년 현재 32.4%로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고도경제성장기 동안 공보육체계가 확립되었던 일본이었지만, 여성에 의한 가정내 보육이 당연시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 하에 대부분의 여성(가족)들이 가정보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데에 비해 현재는 그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령자개호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개호(가족내 주개호자가 가족·친족인 경우)의 규모를 보면 1992년 현재 97.8%(1971년 95%) 포인트로 나타났는데, 그 주개호자의 구성을 보면 배우자가 50.0%로

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공급주체를 다원화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보육소의 다기능화를 도모해 왔다고 할 수 있다(마경희·이재경, 2007; 김지미, 2011; 全國保育団体連絡會·保育研究所編, 2009: 24-27). 그리고, 고령자개호정책은 가족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던 19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를 지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재가복지서비스를 포함한 고령자개호서비스의 충실을 기하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1988년 다케시나내각(竹下内閣)에 의한 ‘소비세도입법안’을 계기로 소비세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게 위한 조치로서 1989년에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소위, 골드플랜)」이 수립되어, 이로써 10개년계획으로 구체적인 서비스정비의 수치목표가 설정되었다. 이어 1994년도에는 ‘골드플랜’의 개정(‘신골드플랜’ 발표)이 이루어져 고령자개호를 위한 재가·시설서비스의 양적확대가 한층 더 진전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7년에는 ‘개호의 사회화’라는 정책이념을 내걸고 개호보험제도가 도입(2000년 4월 실시)됨으로써 종래의 ‘가족개호’로부터 ‘사회적 개호’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어 공적개호지원체제가 정비되었던 것이다(김지미, 2010; 平岡一, 1998; 菊池いづみ, 2010). 관련하여, 이하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는 일본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데이터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19) 아동 보육율 관련 6세 미만 아동수는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tat.go.jp/data/jinsui/2.htm#02>)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보육소 입소아동수는 全國保育団体連絡會·保育研究所編(2009: 227)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가장 많고, 동거자녀 및 친족 45.1%, 비동거자녀 및 친족 2.7%, 홈헬퍼 및 가정부 1.3%, 기타 0.9% 순으로 가족개호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川崎市民生局高齢社會總合對策部計畫課, 1993: 37). 이를 통해서는 일본에서 ‘가족주의’적 복지국가체제가 형성된 고도경제성장기(1960·70년대)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반까지 재택에서의 고령자개호가 거의 대부분 ‘가족·친족’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사회적 개호’으로 개호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정책전개를 반영한 시점인 2007년 현재 가족내 개호제공자(주개호자)의 구성을 보면, ‘가족·친족’ 비율이 76.6%, 홈헬퍼 5.6%, 개호자없음 4.2%(기타 무응답 13.6%)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개호의 규모가 약 23% 포인트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川崎市健康福祉局長壽社會部高齢者事業推進課, 2008: 140).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07년 현재 개호제공자(주개호자)인 ‘가족·친족’의 세부구성을 보면, 배우자가 27.6%로 가장 많으며,²⁰⁾ 딸(23.4%), 아들(12.7%), 며느리(9.8%), 기타친족(1.4%), 형제자매(1.2%), 사위(0.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川崎市健康福祉局長壽社會部高齢者事業推進課, 2008: 140-141). 이를 통해서는 개호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가족개호 제공자에서 차지하는 여성비율(배우자, 딸, 며느리)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들에 입각하자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아동보육 및 고령자개호에서 차지하는 가족돌봄의 비중이 크다고 할지라도 보육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한 양적 확대와 공적개호지원체제가 정비되면서 가족(여성)에 의한 보육·개호 부담이 일정 정도 경감되어 가족내 돌봄제공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둘째, 종래 가계보조적인 파트타임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적개호지원체제가 정비되면서 ‘개호노동력’(홈헬퍼=방문개호원)²¹⁾으로 대거 편입되어 공적개호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의 노동

20) 주개호자가 배우자인 경우를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49.6%이고 여성은 15.7%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이 여성 배우자에게서 개호받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川崎市健康福祉局長壽社會部高齢者事業推進課, 2008: 141).

21) 홈헬퍼는 개호보험제도 도입에 즈음하여 방문개호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방문개호원이란, 개호보험법의 지정을 받은 방문개호사업소에서 일하는 자로서 고령자 등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분의 개호사업소에서 등록헬퍼를 두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²²⁾ 등록헬퍼가 있는 사업소의 경우 방문개호원 중에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71.1%로 방문개호원의 노동상 지위가 불안정함을 엿볼 수 있다(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 2007). 또한, 방문개호원의 취업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15.4%이고 비정규직이 83.3%(이는 근무형태 불분명 1.3%를 포함한 것임)로 나타났으며,²³⁾ 이들의 통상 평균임금(각종수당, 교통비, 세금 등을 포함한 임금액)은 월급자의 경우 187,804엔, 일급자의 경우 8,979엔, 시급자의 경우 1,228엔으로 나타났다(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 2010: 13, 42). 이러한 실태를 개호직 전체와 비교해 보면, 방문개호원이 월급은 낮고 일급과 시급은 조금 높으며(개호직 전체의 평균임금은 월급자 212,432엔, 일급자 8,208엔, 시급자 1,098엔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중은 방문개호원이 월등히 높음(전체 개호직의 경우 정규직은 49.1%, 비정규직은 49.5%, 근무형태 불분명 1.4%임)을 알 수 있다(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 2010: 13, 42).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복지개혁 흐름 속에서 서비스공급의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양적으로 확대된 보육정책의 여성노동보장 기능을 인가보육소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 특징 및 여성(엄마)들의 취업실태를 통해 보면,²⁴⁾ 일하는 엄마의 절반 정도가 취학전 아동의 주간보육에 인가보육소를 이용하고 있어 보육소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등의 생활원조와 목욕 등의 신체개호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최근의 조사결과(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 2010: 13, 37)에 의하면, 이들의 평균 연령은 50.5세이고, 성별은 여성이 93.5%(남성 6.5%)로 중·고령의 여성들이 방문개호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등록헬퍼란, 개호사업소에서 일하는 홈헬퍼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사업소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자신이 일하기 좋은 시간에 일하는 홈헬퍼’를 말한다. 이들은 자택에서 바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파견되어 일이 끝난 후에는 바로 자택으로 돌아가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교통비조차 지급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 23) 여기에서 말하는 정규직이란,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로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비정규직이란, 정사원 이외의 노동자(계약사원, 위탁사원, 임시고용자, 파트타임노동자, 기타)를 말한다.
- 24) 이를 위한 자료는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액의 보조금이 투입되어온 인가보육소의 보육서비스라는 현물급여가 아이를 가진 세대간에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그 현상을 밝힌 후에 보육정책(특히 보육료부담)이 취학전 아동 엄마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大石亞希子(2003)에서 인용하였다.

자녀양육과 취업의 양립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 인가보육소를 이용하는 가구의 아버지 소득평균은 가장 낮고, 이것이 엄마취업에 의한 소득으로 보충되어 전체 가구소득 기준에서의 소득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보육소의 여성노동보장 기능이 저소득으로 인한 가계보조 차원에서의 지원에 머물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인가보육소를 이용하는 엄마들의 평균소득이 145만엔(중위소득의 경우 80만엔)으로 대부분이 소득세(소득세 부담률 31.2%)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大石亞希子, 2003: 66-67).²⁵⁾ 즉 이러한 여성들의 노동실태에 입각하자면, 일본에서 공적개호지원체제가 정비되면서 만들어진 여성일자리 및 공공보육의 축소(즉 보육정책의 민영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종래의 가계보조적인 임금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셋째, 종래 공적복지의 한계를 보충해온 복지볼런티어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도경제성장기에 고령자복지 관련 활동을 전개했던 볼런티어그룹이 1980년대 이후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 추적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에서는 복지국가체제 재편과정을 통해 고령자복지서비스에서의 볼런티어활동이 대거 양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川崎市社會福祉協議會・ボランティア活動振興センター, 2009), 이는 일본정부가 1990년대 이후 개호서비스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공적개호를 담당할 주체의 하나로서 제반 시민활동을 조성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安立清史, 2005: 104-107). 더욱이, 이러한 시민활동단체 중에 주민참여형 재가복지서비스활동의 한 형태로서 출자형 비영리단체인 ‘협동조합형 복지서비스제공단체’(워커즈컬렉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이유는, 최근 이러한 단체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위탁한다든지 NPO법인을 취득하여 개호보험제도의 사업자로 지정되어 개호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등장하고

25) 그에 의하면, 일하는 엄마들 소득이 저소득인 이유 중의 하나는 일하는 엄마의 약 3할이 자영업자로 그 대부분이 무급 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어 본인의 수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大石亞希子, 2003: 57).

있기 때문이다.²⁶⁾ 이에 이러한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 실태를 살펴보면, 그 보편적인 취업형태는 일반 고용시장에서의 ‘파트타임노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多様な働き方研究會, 2005: 65-81; 第8回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全國會議實行委員會, 2008: 72-79). 특히, 이들의 임금형태 및 임금수준을 보면, 임금(분배금)은 대부분 시간급(61.0%)과 월급(23.0%)으로 지급받고 있고(多様な働き方研究會, 2005: 74), 임금수준(연간분배금)은 7할 이상이 조세제도상 ‘사회보험 제도에의 강제가입이 면제되는 소득기준’인 ‘130만엔 미만의 소득’(그 중 대부분이 남편의 배우자공제를 받으면서 또한 본인의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기준인 ‘103만엔 이내의 소득’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多様な働き方研究會, 2005: 75).²⁷⁾ 이러한 결과를 구성원들의 세대연간 소득과 비교해보면, 절반 이상이 세대연간소득 ‘700만엔 이상’으로 ‘중산 계층 이상’의 소득집단이라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多様な働き方研究會, 2005: 74). 이를 통해서는 이들 단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일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입각하자면, 일본에서는 공적개호지원체제가 정비되면서 고령자개호(복지) 관련 볼런티어활동이 대거 양산됨으로써 종래의 복지볼런티어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고령자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비영리단체’가 여성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복지볼런티어에서 ‘가계보조적인 사회적 노동자’에로 나아갈 수 있는 고용환경도 정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요컨대,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입각하여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복지국가체제가 재편되는 과정을 통해 가족내 돌봄제공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26) 개호보험사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NPO법인·협동조합의 비중은 2007년 현재 재가서비스의 경우 10.2%, 시설서비스의 경우 0.8%이다(川崎市健康福祉局長壽社會部高齢者事業推進課, 2008: 197). 관련하여 부언하면,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단체 중에서 아동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단, 보육서비스 공급주체 전체에서 보면 미미한 수준임).

27) 단, 이는 대도시인 가나가와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지만, 전국조사에 의하면 약 9할 가까이가 ‘130만엔 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第8回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全國會議實行委員會, 2008: 74).

축소된 반면, 한편으로 공적개호지원체제가 정비되면서 종래 ‘무상’으로 가족개호를 제공해온 여성들이 이제는 ‘유상’으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종래의 가계보조적인 임금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행정당국이 사회적 돌봄을 담당할 주체의 하나로서 제반 시민활동을 조성·지원해온 결과, 종래 복지보ランティア로서 공적복지의 한계를 보충해왔던 여성의 역할은 공적케어체제가 정비된 현재에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그 역할이 ‘가계보조적인 사회적 노동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일본모델 전환과정에서의 여성의 입장은 가족돌봄 담당자에서 사회적 돌봄을 담당하는 주된 일꾼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만, 그것이 역으로 ‘가계보조적인 생계부양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보육·개호를 중심으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 재편과정에서의 젠더관계(여성의 입장)를 포착할 경우 일본모델이 ‘탈가족주의’적인 모델이 아니라 ‘신가족주의’적인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젠더 관점에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를 둘러싼 기존 논의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일본의 복지(국가)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관계를 살펴보고, 그러한 젠더관계(특히, 여성의 역할)가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검토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장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형성과정에서는 여성들이 ‘가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가족내 돌봄제공자’, ‘가계보조적인 파트타임노동자’, ‘지역사회의 복지보ランティア’ 등으로서

일본의 복지국가 기능을 대체하였다고 하는 것이다.²⁸⁾ 둘째, 이러한 일본 모델은 21세기 초반 현재 가족주의적인 복지(국가)레짐에 내재해 있던 젠더관계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대체구조(가족복지 등)가 기능 부전에 빠져버림으로써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셋째,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적개호지원체제가 정비됨으로써 ‘가족주의’적인 복지(국가)체제인 일본 모델이 ‘탈가족주의’적인 모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넷째, 일본모델이 탈가족주의적인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하여 보육·개호를 중심으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 재편과정에서의 젠더관계(여성의 역할, 지위 등)를 포착할 경우 일본모델이 ‘탈가족주의’적인 모델이 아니라 ‘신가족주의’적인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를 둘러싼 기존 논의들을 재검토하여 일본의 복지(국가)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관계를 가시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종래 가족(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온 보육·개호에서의 여성 역할이 일본형 복지국가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는 최근 일본형 복지국가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 모델(즉 ‘탈가족주의’ 모델)을 둘러싸고 일본의 복지국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주의’적인 일본모델이 ‘신가족주의’적인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일본모델의 근간에 ‘모습을 바꾼 가족주의’가 건재하고 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재편과정에서는 종래 가족주의적인 복지국가가 전제해 온 성별 역할분업이 모습을 바꾼 형태(가령, ‘신성별역할분업’²⁹⁾)로 재편성

28) 단, 아동보육과 관련하여서는 가족주의적 복지국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극히 일부이지만 복지국가 혜택을 향유하면서 사회내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온 여성들도 있었다.

29) 필자가 생각하는 ‘신성별역할분업’이란, 과거의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해 「남자는 일·보조적인 가사, 여자는 가사·보조적인 일」로써 성별 역할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념을 더욱 정치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초반 현재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환경변화 속에서 ‘신성별역할분업’을 전제하는 ‘신가족주의’적인 일본형 복지(국가)체제는 과연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사와는 최근의 저서에서 1990년대 이후 경제의 글로벌화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현저하게 변화·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은 재구축되지 않고 기존 유형 그대로 작동함으로써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는 ‘역기능’(가령, 탈법성 초래, 노동시장의 불안 증폭, 초저출산현상, 자살문제 등)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다(大澤眞理, 2007: 71; 김영 옮김, 2009: 83). 이에 그는 무엇보다도 우선 탈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를 재구축하고 동시에 ‘생활의 협동’(즉 사회의 중범위 수준에서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생활보장)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大澤眞理, 2007: 191-192; 김영 옮김, 2009: 218-220). 특히 ‘생활의 협동’을 위해서는 재단과 협동조합·공제조합·협회를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파트너, NGO, 기업의 사회적 책임(가령, 사회적 기업의 전개) 등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러한 오사와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향후 여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또 ‘사회적 경제’³⁰⁾를 움직이는 주된 주체의 하나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할 경우, 문제는 본 연구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일본의 복지(국가)모델이 ‘신성별역할분업’을 전제하는 ‘신가족주의’적인 모델에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즉, 향후 일본의 복지모델 하에서 여성의 지위(입장)는 과거의 ‘남성생계부양자형’이었을 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행보와 관련하여서는 종래의 ‘가족주의’가 그 근간에 새로운 모습(‘신가족주의’)으로 다시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30) 앞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모델 전환과정에서 여성들이 ‘협동조합형 복지서비스제공단체’(워커즈컬렉티브)에서 고용기회를 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단체를 ‘사회적 경제’의 한 부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출발선으로 하여 새로운 판을 짤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복지국가 사례를 다룬 본 연구가 한국의 복지국가 연구 및 복지(국가)체제에 주는 함의는 무엇보다도 젠더 관점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책영역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복지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관계(즉 여성의 다양한 입장)를 드러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히 2000년대 이후 보육정책의 급속한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복지체제(‘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내재된 젠더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최근 한국의 복지국가 연구에 있어서도 젠더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대두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마경희·이재경, 2007; 장지연, 2009; 김영미, 2009, 2011; 안세아, 2011). 가령, 장지연(2009)은 한국사회의 젠더레짐과 복지레짐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한국사회가 강한 가족주의에 기댄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특히 여성)의 소득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한국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평등에 기반한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있다(장지연, 2009: 525-529). 또한, 2000년대 이후 일가족양립정책에서의 변화를 복지체제와 젠더레짐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한 김영미(2009)는 최근 확대된 보육서비스를 통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육아휴직제도가 젠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재구성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기존 한국의 복지체제(돌봄노동을 둘러싼 국가-시장-가족의 역할 분담)와 젠더관계(유급-무급노동을 둘러싼 남녀의 책임분담)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다.³¹⁾ 이에 그는, 한국 복지체제와 젠더관계의 변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돌봄의 사회화’와 ‘남성들의

31) 이와 비슷한 논의로서,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의 자녀양육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복지체제(‘가족주의적’ 복지체제) 재편의 속성을 검토한 마경희·이재경(2007)은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의 자녀양육지원의 확대는 기존의 젠더관계에서 여성에게 지워진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적 대응일 뿐 젠더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한다.

역할 변화(육아휴직이용률 강화방안 도입, 가족내에서의 역할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김영미, 2011: 74-78). 필자도 이러한 주장들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나아가 필자는 최근 복지국가를 둘러싼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족주의적’ 복지체제에 내재된 젠더관계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돌봄을 강조하는 여러 정책들이 정비되었음을 감안할 경우 한국 복지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가족주의’에 대한 분석(가령, 일본과 같이 ‘신가족주의’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심도있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본 글을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미(2009). 한국의 복지체제와 젠더: 일가족양립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4호, pp.281-305
- 김영미(2011).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가능성 모색. 2011년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58-81
- 김지미(2010). 일본형 복지국가체제 재편과정에서의 ‘가족주의’에 관한 연구: 지자체의 고령자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pp.343-374
- 김지미(2011). 최근 일본에서의 보육·양육지원정책의 변화 양상: 도쿄도의 시도와 경남에의 시사점, 경남발전, 제113호, pp.23-34
- 마경희·이재경(2007).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과 젠더: 한국과 일본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9집 제1호, pp.91-116
- 안세아(2011). 젠더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체제유형 논의: 남부유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2호, pp.27-53
- 장지연(2009). 한국 사회 젠더레짐과 복지국가의 성격, 정무권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I, 서울: 인간과복지, pp.493-534
- 安立清史(2005). 地域福祉における市民参加, 三重野卓・平岡公一編, 改訂版 福祉政策の理論と實際, 東京: 東信堂, pp.91-111
- 第8回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全國會議實行委員會(2008). Workers' Collective Network Japan 第8回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全國會議 in熊本—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が誕生して25年. 東京: WNJ.
- 平岡公一(1998). 介護保険制度の創設と福祉國家体制の再編: 論点の整理と分析視角の提示, 社會學評論, 49(3), pp.41-57
- 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2007). 平成19年度介護労働實態調査結果. 東京: 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
- 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2010). 介護労働の現状について: 平成21年度介護労働實態調査を中心に. 東京: 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
- 川崎市健康福祉局長壽社會部高齢者事業推進課(2008). 平成19年度川崎市高齢者實態調査報告書. 川崎: 川崎市.

- 川崎市民生局高齢社會總合對策部計畫課(1993). 川崎市高齢者保健福祉計畫. 川崎: 川崎市.
- 川崎市社會福祉協議會・ボランティア活動振興センター(2009). ボランティア・市民活動団体活動紹介ガイドブック. 川崎: 川崎市社會福祉協議會.
- 金智美(2006). 福祉國家体制確立期における自治体福祉政策過程. 東京: 公人社.
- 菊池いづみ(2010). 家族介護への現金支拂い: 高齢者介護政策の轉換をめぐって. 東京: 公職研.
- 宮本太郎(1997). 比較福祉國家の理論と實際, 岡澤憲芙・宮本太郎編, 比較福祉國家論: 揺らぎとオルタナティブ, 京都: 法律文化社, pp.12-43
- 宮本太郎(2003). 福祉レジーム論の展開と課題, 埋橋孝文編, 比較のなかの福祉國家, 京都: ミネルバ書房, pp.11-41
- 宮本太郎・イトペング・埋橋孝文(2003). 日本型福祉國家の位置と動態, エスピンアンデルセン編・埋橋孝文監譯, 轉換期の福祉國家: グローバル經濟下の適應戰略,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pp.295-336
- 大石亞希子(2003). 母親の就業に及ぼす保育費用の影響, 季刊社會保障研究, 39(1), pp.55-69
- 大澤眞理(1993). 企業中心社會を超えて: 現代日本を<ジェンダー>で讀む. 東京: 時事通信社.
- 大澤眞理(2002). 男女共同參畫社會をつくる.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 大澤眞理(2004). 福祉國家とジェンダー, 大澤眞理編, 叢書 現代の經濟・社會とジェンダー 第4卷福祉國家とジェンダー, 東京: 明石書店, pp.17-40
- 大澤眞理(2006). 社會的排除の裝置となった「男性稼ぎ主」型セーフティネット, 武川正吾・イヘギョン編, 福祉レジームの日韓比較,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231-255
- 大澤眞理(2007). 現代日本の生活保障システム: 座標とゆくえ. 東京: 岩波書店, 김영 옮김(2009). 현대 일본의 생활보장체제. 서울: 후마니타스
- 坂田周一(1983). 社會福祉予算の動向, 社會福祉學, 24(1), pp.67-86
- 新川敏光(1993). 日本型福祉の政治經濟學. 東京: 三一書房.

- 新川敏光(2005). 日本型福祉レジームの發展と変容. 京都: ミネルバ書房.
- 新川敏光(2009). 福祉レジーム分析の可能性: 戦後日本福祉國家を事例として, 社會政策, 1(2), pp.49-63
- 武川正吾(1997). 福祉國家の行方, 岡澤憲芙・宮本太郎編, 比較福祉國家論: 揺らぎとオルタナティブ, 京都: 法律文化社, pp.250-275
- 武川正吾(1998). 轉換期の社會政策學, 社會政策叢書編集委員會編, 社會政策叢書 第22集 社會政策學會100年: 百年の歩みと來世紀に向かって, 熊本: 啓文社, pp.71-106
- 武川正吾(1999). 社會政策のなかの現代: 福祉國家と福祉社會.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김성원 옮김(2004).
- 일본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론. 서울: 인간과복지
- 武川正吾(2005). 日本の福祉國家レジーム: 福祉政治・給付國家・規制國家, 武川正吾・金淵明編, 韓國の福祉國家・日本の福祉國家, 東京: 東信堂, pp.108-127
- 多様な働き方研究會(2005). NPO、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等に見る多様な働き方. 神奈川縣.
-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1984~1985). 福祉國家 全6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1988). 轉換期の福祉國家 (上)・(下).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埋橋孝文(1997). 現代福祉國家の國際比較: 日本モデルの位置づけと展望. 東京: 日本評論社.
- 埋橋孝文(2001). 福祉國家戰略と社會保障制度の再設計, 社會政策學會編, 社會政策學會誌第6号: 「福祉國家」の射程, 京都: ミネルバ書房, pp.129-140
- 全國保育団体連絡會・保育研究所編(2009). 2009 保育白書. 東京: ひとなる書房.
- Esping-Andersen, G.(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岡澤憲芙・宮本太郎監譯(2001). 福祉資本主義の三つの世界: 比較福祉國家の理論と動態. ミネルバ書房.

- Esping-Andersen, G.(1992). The Three Political Economies of the Welfare State, Jon Eivind Kolberg(ed.), The Study of Welfare State Regimes, E. Sharpe, 92-123
- Esping-Andersen, G.(1997). Hybrid or Unique? The Distinctiveness of the Japanese Welfare Stat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7(3), 179-189
- Goodman, R. and I. Peng(1996).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G. Esping-Andersen(ed.),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London: Sage, 192-224
- Jones, Catherine(1993). The Pacific Challenge: Confucian Welfare State, C. Jones(ed.), *New Perspectives on the Welfare State in Europe*, London: Routledge, 198-217
- Osawa, Mari(2005). Koizumi's 'robust policy': governance, the Japanese welfare employment regime and comparative gender studies, Glenn D. Hook(ed.), *Contested Governance in Japan, Sites and issu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111-129
- Siaroff, A.(1994). Work, Welfare and Gender Equality, Diane Sainsbury(ed.), *Gendering Welfare States*, London: SAGE Publications, 111-129
- Uzuhashi, T.(2003). Japanese Model of Welfare State: How it was changed throughout 'the lost decade' of the 1990's?, *The Japanese Journal of Social Security Policy(Web Journal)*,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2), 1-11
- Uzuhashi, T.(2005). Japan as a Workfare Regime: A Note for the Study of Asian Type of Welfare State, a paper submitted to the ESAP(East Asia Social Policy) Conference, University of Kent at Canterbury, 30th of June-2nd of July.

Abstract

A Study on the Japanese Type Welfare State Regime from Gender Perspective

Kim Ji-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gender relations in the welfare state models, and to investigate how the gender relations, the roles of the women in particular, were positioned in the changing process of those models through examining the previous studies on the Japanese type welfare state regimes from gender perspective. Thinking deeply about the current research trend of comparative studies of welfare states in the Wester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Japanese welfare state model from gender perspective for a proper research result at first. Based on tha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gender relations are inherent i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Japan's welfare state system, and how it alters or changes in the recent years. Finally, this study raised some problems of the Japanese type welfare state regime which seems to change recently.

Key words: the Japanese type welfare state regime, gender perspective, the gender relations, the roles of the women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nam University (kjimi229@kyungnam.ac.kr)

